한국경제 살리기 연속토론회

반기업정서, 개선방안은?

| 일 시 | 2016년 10월18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회 순

사 회

- 김 영 봉 (중앙대 명예교수)

패 널 토 론

- 안 재 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

- 황 인 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 이 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 김 대 호 ((사)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질의·응답

폐 회

목 차

패 널 토 론

반기업정서의 원인과 그 완화방안

- 안 재 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

반기업정서, 개선방안은?

- 황 인 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반기업정서를 치유하는 길도 자유경쟁의 실천에서 찾아야

- 김 이 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반기업정서의 깊은 뿌리

- 김 대 호 ((사)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한국경제 살리기 연속토론회>
반기업정서, 개선방안은?

패널토론

반기업정서의 원인과 그 완화방안

안 재 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

1. 반기업정서의 원인

반기업정서의 원천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 대중들의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이나 기업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반기업정서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1) 기업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

많은 사람들이 기업은 그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윤을 얻지 못하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고 만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이윤을 얻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상품을 다른 경쟁자보다 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고 퇴출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양질의 상품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우수한 근로자를 확보하여야 하고, 우수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에서 기업 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기업이 근로자를 착취할 수 없고 근로자는 노동조합이 아닌 기업 간 경쟁에 의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이익은 소비자나 근로자의 이익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의 이윤은 노동자와 소비자를 착취하여 얻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다.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산요소의 공급자에게는 소득을 창출시켜 경제적 생활을 영위케 하고,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혁신을 주도하여 부를 축적해 가는 경제주체이다. 즉 기업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함은 물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다.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기능이고 자연스럽게 사회에 선(善)을 베푸는 방법이다. 반면에 기업은 생산에 특화(特化)한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기업이 이윤과 부를 창출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에 노력과 자원을 쓰게 되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충분하게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말은 기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상당부분 지식인들의 책임이 크다. 우리 사회에 반자본주의적, 반기업적, 반자유주의적, 복지국가주의적 지식인이 매우 많다. 그러한 지식인들 중에서는 마르크스 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며 대기업에 대해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시장경제를 원론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며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지식인들이 잘못된 믿음과 반감으로 반기업적 이론과 철학을 만들어 낸다.

반기업적 이론을 만들어 내는 지식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과 기업에서의 자원배분과 의사결정을 혼동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혼동으로 각종 경제문제에 대한 분석을 오도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도 차분히 논의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일을 방해한다. 시장과 기업에 대한 구분과 이해는 반기업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초라 할 수 있겠다.

자유시장에서는 가격기구가 자원배분을 담당한다. 즉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하는 데 필수적인 각 경제주체들을 협동으로 이끌어 낸다. 마찬가지로 기업 내에서는 기업가가 자원배분을 명령하고 통제하여 구성원들을 협동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시장과 기업의 자원배분 방법이 다르다.

시장에서 어떤 생산요소가 A산업보다 B산업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다면 그 생산요소는 두 산업에서의 가격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A산업에서 B산업으로 이동한다. 이는 자원의 이동을 명령하고 유도하는 것이 가격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내에서 어떤 생산요소가 A부서에서 B부서로 이동했다면, 이는 상대 가격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가가 그렇게 이동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즉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은 가격의 인도 아래 각 경제주체들의 분권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반해 기업 내에서의 자원배분은 기업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기업은 시장과 달리 명령과 통제 체제이고 의사결정은 중앙집권적이며 자원배분은 기업가의 명령과 통제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생산과 관련해서 기업 밖에서는 일련의 교환 거래를 유도하는 가격에 의해 이루어지고, 기업

내에서는 기업가의 명령과 통제로 대체하게 된다. 즉 기업 내에서는 기업가가 자원배분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바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 기업과 기업인의 문제

한국에는 기업을 이끌어 오며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 훌륭한 기업가들이 많다. 그러나 일부 기업인들의 사익편취행위와 위·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편법증여·상속, 분식회계, 시세조정, 내부자 거래, 배임, 담합, 탈세, 뇌물수수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것들이 반 기업정서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14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광그룹 회장의 사건, X파일 사건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유죄 판결, 두산그룹 형제의 난과 비자금 폭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대한항공 '땅콩' 회항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반감은 커졌다.

물론 사건 하나하나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서 국내 기업이나 기업인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확대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앞선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예의주시하며 변명과 희생양을 찾고 있다. 그 때 자기보다 앞서있는 사람이 잘못하는 경우 바로 비난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기업이고, 기업 소유자 일 경우 그것은 전체 기업에 대한 반감으로 확산된다.

2.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한 대책

1) 시장경제 교육

반기업정서는 잘못된 지식과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으면 반기업정서를 상당부문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선동가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과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인들의 잘못된 믿음과 반감을 불식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반기업정서는 기업, 특히 대기업에 있어서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그 장애물을 제거

하기 위한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반기업정서의 대상이 특히 대기업과 대기업 총수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시장경제 교육 투자에 매우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기업과 재벌 총수들은 여기에 대한 투자에 배우 인색하다. 지금 시장경제 연구와 교육을 위한 제대로 된 싱크 탱크가 없는 것이 그 반증이다. 지금 반기업정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대기업에 대단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어쩌면 대기업과 대기업 총수들의 자업자득인지도 모른다. 대기업, 대기업 소유자, 자본가들이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반기업정서, 특히 대기업과 대기업 소유주들에 대한 반감이 강한 한국에서 시장경제 교육을 통해 반기업정서가 완화되면 가장 많은 수혜를 입는 쪽이 대기업과 그 소유주다. 따라서 대기업과 그 소유주, 그리고 자본가들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2) 기업인의 준법정신

반기업정서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식과는 별개다.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할지라도 마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업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반기업정서의 확산과 확대는 기업과 기업 소유자들의 행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기업 소유자들의 불법적, 위법적, 편법적인 행위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우리 사회에서 반기업정서가 팽배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기업과 그 소유주들의 불법, 탈법적인 행위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 처벌이 너무 가벼웠던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비난과 반감이 기업과 기업 소유주들에게 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기업 소유주들은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편법과 위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크게 사라질 수 있다.

기업과 소유자, 그리고 경영자는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 한다. 그 도덕적 의무란 다른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계약을 준수하고, 사기를 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것을 강요나 강제하지 않는 것이며, 사회의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은 가격지지, 관세, 보조금과 같은 정부의 경제개입을 지지하지 않아야 한

다. 그러한 것이 자신들에게 보다 높은 이윤을 낸다고 할지라고 그것은 곧 강제를 사용하는 것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윤리와 도덕률로 운영하는 것이 기업에게 이익이다. 시장은 정중하고,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신뢰가 있고, 창조적이며 공정한 기업인에게 보상을 한다.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기업을 속이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종업원을 착취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반기업정서의 해소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기업은 윤리 경영해야 한다.

반기업정서, 개선방안은?

황 인 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반기업정서의 실체는?- 반기업정서는 Misnomer

■ 반기업정서를 문제 삼고 개선하겠다면 그 본질과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순서

- 반기업정서 표현은 2001년 Accenture 보고서를 계기로 2003년부터 대한상의에서 기업 호감도를 조사하면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사회적 현상과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는 표현인지 재고의 여지 있음
- 일반적으로 정서(情緖)라 함은 '이성'과는 다른 '감정'의 작용을 의미하며, 반기업정서에 대해서도 '기업 또는 기업인에 대해 갖는 막연한 반감'으로 정의되고 해석되는 경향이 있음
- 이와 같이 반기업정서를 이념적 취향 또는 (비논리적) 감성 작용으로 치부하면 반기업정서 개선활동은 훈계, 계몽주의적 중심으로 흐르거나 또는 환심을 사려는 방향으로 이어지며, 이런 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반감, 저항을 키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실체를 들여다보면 반기업정서는 각인의 이념적 지향성(가치관), 감성의 작용 외에도 직·간접 경험, 지식·정보, 집단 문화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판단(emotional judgement)이 아니라 인식(perception)의 문제임.

- 반기업정서 보다는 기업인 또는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반기업적인식**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그러나 본고에서는 세미나 주제에 맞추어 편의상 반기업정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

2. 반기업정서를 중요하게 봐야하는 이유는?- Perception Does Matter.

■ 기업가적 활동이 사회 구성원의 평가와 인식(인정, 무심, 부정)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기업가적 활동에 대해 가장 큰 보상은 사회적 인정이다 등등

-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근본요인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며, 기업가정신은 해당 주체가 속한 사회의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받음(North, 1990; Henrekson, 2007)

- 제도는 공식 제도(formal institutions)+비공식 제도(informal institutions)를 포괄하며,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에서 '문화적 지지(cultural support)'를 포함시켜 기업가정신지수를 평가하는 이유도 이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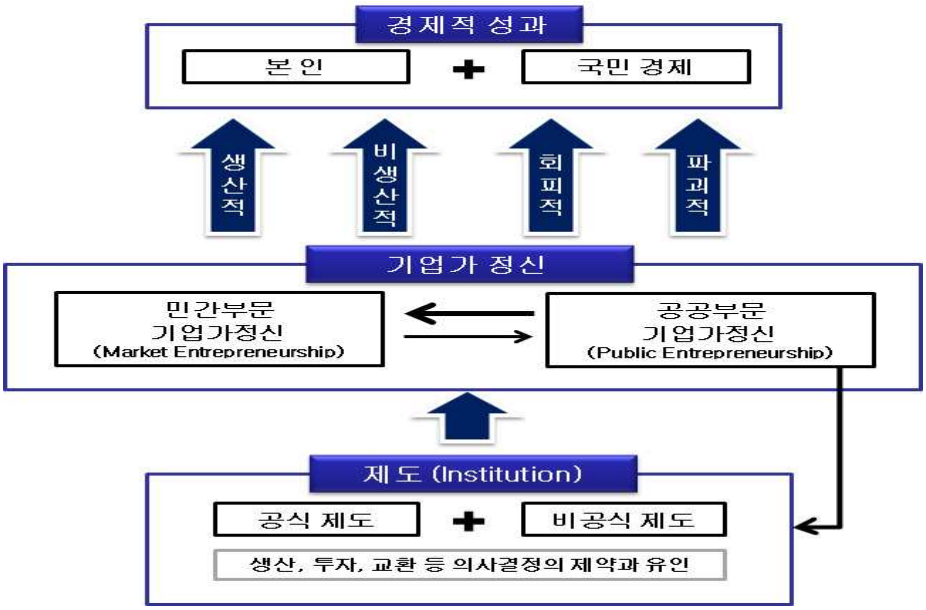
- 요약하면 비공식 제도(informal institutions)에 속하는 반기업정서는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

① 사회 전체의 생산적 기업가정신 총량(capacity) 약화에 기여

②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법령의 개선을 막고 포퓰리즘 규제의 신설·강화를 뒷받침하는 등 공식 제도(formal institutions) 악화에 기여 → 성장에 효율적인 경제제도 확립을 막는 걸림돌

③ 법령, 정책의 근거가 없이도 기업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 통큰 치킨, MRO, 기업농 등

【그림】 반기업정서를 포함하는 제도가 기업가정신,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출처: 황인학(2016)

3. 한국의 반기업정서,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인의 경제관을 대표하는 특징

- 윤영민·최윤정(2009)은 반기업 정서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경제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평가
- 반기업정서가 한국 특유의 현상은 아님. 19세기 중엽, 미국의 robber baron, Veblen의 유한계급론(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1899), Williamson(1985)의 '적대적 전통(inhospitality tradition)' 등
- 수준과 지속성의 문제

■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속

-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각국 국민의 인식은 조사기관, 조사시점, 조사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의 반기업정서는 여러 기관의 국제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
- 2001년 Accenture, 22개국 CEO 조사 : 한국인 CEO의 70%가 실감한다고 응답
- 중앙일보 한중일 인식조사 비교(2003, 2006)
- 유럽집행위원회(EC) 조사(2009, 2012): EU 27개국의 기업가에 대한 우호적 인식은 49%에서 53%로 높아지고 부정적 인식은 9%에서 7%로 감소. 반면에 한국에서 기업가 호감도는 2009년 30%에서 2012년에 34%로 약간 높아졌지만 반감은 두 기간 모두 17%로 가장 높은 수준 (EU 회원국 평균 7%, 중국과 일본의 6~7%, 미국 4%)
- GlobeScan 26개국 대기업 및 정부 신뢰 조사(2005, 2013): 한국은 유일하게 대기업 신뢰 하락(38%→36%) & 2013년에 정부 신뢰(47%)보다 대기업 신뢰(36%)가 낮은 경우

■ 반기업정서를 대기업집단과 지배주주에 국한된 문제로 보는 경향

- KDI 보고서(2007)에서 반기업 정서를 "재벌·재벌 총수·공기업 및 부자에 대한 반감(p.1)"으로 정의에 기초하여 윤영민·최윤정(2009), 김수한·이명진(2014)은 반기업정서를 '대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로 접근
- 2014년 필자가 조사한 결과, 기업에 대한 우호적 응답비율은 중소기업(85%) > 대기업(65%) > 공기업(45%) > 기업집단(32%)의 순서를 보이는 등 대기업보다 공기업에 대한 반감이 더 높음

- 전문경영인에 대한 반감(21%)보다 소유경영자에 대한 반감(40%)이 높지만 기업 전반과 전문경영인에 대한 반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무시할 만큼 낮은 것은 아님
- 선진국의 경우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본질에서 연유한다거나, 분기자본주의(quarterly capitalism)를 추구하며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경영인에 대한 반감 중심으로 보는 것과 차이
- 예: 영국의 Stewardship Code를 제정한 배경: 부재지주경영/Ownerless Corporation

■ 위 세 가지의 특성상 한국의 반기업정서는 정치적으로 활용되기 좋은 대상
-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대기업 때리기

■ 막연한 가치관의 문제로 간주, 실증연구 미흡
- 반기업정서며 개선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주장은 많은 반면 체계적 분석, 연구 미흡
- 규제연구에서도 반기업정서가 문제이니 개선해야 한다는 식의 가치판단적인 논의가 주류를 이루며, 반기업정서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제약조건으로 취급되는 정도

4. 실증분석 결과와 시사점

■ 2014년 인구통계학적 분포에 기초하여 2000명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황인학, 2016)
- 반기업 정서를 인식의 문제로 접근, 인구통계학적 변수 외에 경제 IQ(기업, 시장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 등과 연결시켜 실증적으로 원인 분석

■ 분석 결과: 아래【표】참조
① 경제 IQ 변수(기업의 본질, 시장과정에 대한 인식, 경제적 통계 정보 등)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반기업정서의 형성, 증강에 영향을 미친다.
⇒ 반기업정서는 지식, 정보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음; 교육 효과는?
② 사회제도,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반기업정서가 높다.
⇒ 정치권 또는 정부가 앞장서 반기업정서를 높이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자해 행위
③ 직업군 중에 공무원의 대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반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 규제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④ 이념, 학력, 연봉 등 기타 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은 미미

⇒ 반기업정서를 보수/진보의 잣대와 연결시키는 것의 문제

【표】 반기업 정서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기업 전반 반감(I)		대기업 반감(II)	
			coeff.	*t*-value	coeff.	*t*-value
경제 IQ	기업의 이윤배분	소비자 우선	0.057	*1.28*	0.0746	*1.55*
		주주 우선	**-0.169**	***-2.40***	**-0.133**	***-1.76***
		경영자 우선	0.049	*0.42*	-0.071	*-0.57*
	가격결정 (수요와 공급=1)		**-0.117**	***-2.26***	-0.058	*-1.05*
	대기업 수 (적다=1)		-0.065	*-1.54*	**-0.160**	***-3.56***
	바람직한 기업상	일자리	-0.072	*-0.66*	0.023	*-0.19*
		준법	-0.003	*-0.03*	0.13	*1.07*
		윤리	0.112	*1.05*	**0.246**	***2.17***
		사회공헌	0.059	*0.50*	0.177	*1.41*
	경쟁 인식 (1~4(나쁜 것))		**0.065**	***3.60***	**0.073**	***3.83***
사회 자본	법준수 (안 지킴=1)		**0.194**	***3.44***	**0.214**	***3.55***
	공무원 불신 (1~4(불신)		**0.145**	***4.00***	**0.077**	***1.99***
	정치인 불신 (1~4(불신)		**0.128**	***3.55***	**0.218**	***5.64***
	법조인 불신 (1~4(불신)		**0.185**	***5.06***	**0.256**	***6.54***
	언론인 불신 (1~4(불신)		0.045	*1.36*	0.004	*0.11*
보상 인식	향후 보상기대 (1~5(개선))		**-0.069**	***-3.76***	-0.031	*-1.59*
	노력 대비 보상 (1~5(많음))		**-0.071**	***-3.85***	**-0.069**	***-3.53***
인구 통계 변수	성별 (여성=1)		-0.070	*-1.57*	**-0.135**	***-2.86***
	연령대 (1~5(노령))		**-0.108**	***-6.31***	**-0.047**	***-2.57***
	학력 (1~5(고))		-0.021	*-0.66*	-0.003	*-0.09*
	연봉수준 (1~5(고))		-0.049	*-1.53*	-0.03	*-0.87*
이념 성향	진보		0.025	*0.51*	0.052	*0.97*
	보수		0.066	*1.28*	0.016	*0.29*
직업	중소기업		**-0.105**	***-1.92***	-0.071	*-1.22*
	공무원		0.146	*1.52*	**0.184**	***1.79***
	전문직		-0.056	*-0.81*	0.046	*0.63*
	자영업자		-0.039	*-0.52*	0.043	*0.55*
	대기업		**-0.184**	***-2.01***	**-0.458**	***-4.68***
상수항			**1.815**	***8.05***	**1.098**	***4.55***
관측치			2,000		2,000	
R-squared			0.179		0.188	

* 굵은 숫자는 신뢰구간 10% 이하에서 유의적임

5. 맺음말

■ 반기업정서의 개선을 원하면 반기업정서의 연구/분석, 전략적 개선방안 모색에 투자해야

- 반기업정서는 이념이나 감성 작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문제가 결합된 현상
- 지식과 정보에 영향을 받지만 올바른 경제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 반기업정서는 사회적 자본의 문제이기도 함: 법치주의를 비롯한 사회 제도에 대한 불신이 반기업정서의 형성 및 확산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사회적 자본은 역사적 경로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교육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한계

반기업정서를 치유하는 길도 자유경쟁의 실천에서 찾아야

김 이 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우리사회의 반기업정서, 기업들이 기득권 방어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경쟁을 실천하고 이를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할 때 줄어들 수 있다.

이윤을 존중하고 손실을 내는 것을 용서받지 못할 죄로 여기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귀가 아플 정도로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다수가 지대추구가 아니라 소비자 선택을 위한 생산 경쟁을 할 때, 다시 말해 자유경쟁을 실천할 때,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런 생산 경쟁의 사회, 즉 자유경쟁의 사회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의 반기업정서는 줄어들 것이다. 결국 반기업정서를 치유하는 길도 자유경쟁의 실천에서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1. 우리사회의 반(反)기업정서를 보여주는 징표들

사실 우리 사회의 반기업정서를 보여주는 징표들을 여기에서 장황하게 다시 논의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일부 징표들에 대해 간략하게만 논의하고 어떻게 이런 반기업정서를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는 편이 바람직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우선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반기업정서가 드러난 경우로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국 폐지했는데, 무엇이 중소기업에 고유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자의적이라는 근본적 문제점을 넘어설 수 없었고 이것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제도가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다시 도입되었다. 정치권이 일반인들의 반기업정서에 영합하고자 하는 생각이었고, 중소기업들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받아 대기업들로부터의 경쟁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이었는데 두 생각들이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최적규모는 소비자의 주관적 선호와 생산조건들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미리 알 수 없다. 현재 이윤을 내면서 생산하는 기업들의 규모를 조사해서 이것을 최적규모로 단정할 수도 없다. 아직 시도해 보지 않은 규모와 방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자동차 모델 T가 나오기 이전의 시점에 최적 자동차생산 규모를 조사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은 모델 T가 나온 이후 수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시장에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 최적규모란 기업가들이 다양한 규모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시장경쟁의 과정에서 정해지고 계속 변화해 간다.

그렇다면 동반성장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중소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을 현재 대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다면 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고, 아직 진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새로운 진입을 막는 정도다. 당연히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을 금지당한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 품목들에 무엇을 포함시키고 무엇을 제외시킬 것인지는 자의적으로 정치적 과정에 의해 결정되고 소위 약자가 보호받으라는 보장도 없다. 내비게이션의 경우,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진 중소기업들은 내비게이션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원하지만 대기업 납품업자들은 대기업의 철수 시 매출 급감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내비게이션을 적합업종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내비게이션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더 열악한 대기업 납품업체들의 처지가 악화된다.

■ 타기되는 이윤

시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윤을 타기해서는 곤란하다. 이윤도 정당한 사유재산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이윤의 보호는 사유재산권의 보호의 한 형태일 뿐이다. 사실 이윤은 기업이 '사회'에 봉사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과학자들이 두통약에 들어가는 약초 재료를 절반만 쓰고 약효가 같도록 만들었다면, 사람들은 이제 종전보다 저렴하게 그 약을 사먹고 절약한 돈으로 다른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다. 분명 그 과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봉사를 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약초가 지천으로 풍부한 섬을 발견했는데 그 섬 주민들이 그 약초를 땔감으로 쓰고 있다고 해보자. 그 약초를 저렴하게 사와서 두통약을 종전보다 값싸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도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더 저렴한 약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봉사했다. 그는 상당한 이윤을 벌 것이다. 사람들이 땔감이라는 예전의 용도에 비해 더 많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로 변경시켰기 때문이다.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것(buy-low sell-high)이 기업가정신의 본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시점과 판매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다. 불확실성이 개재되는 것이다.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결국 (이자를 감안하고) 구매한 원재료들 가격들을 합해도 판매가격이 더 높아야 이윤을 낼 수 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는 사람들이 기꺼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로부터 결과적으로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만 있는 용도에 쓰도록 했음을 의미한다. 잘못 판단해서 약의 재료에 쓰는 약초를 사와서 땔감으로 쓰게 만든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 따르는데 그것이 손실이다. 이런 손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그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그의 실패는 자신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에게도 심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의 피해 역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판단 아래 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대신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투자하거나 빌려준 사람이 성공했을 때 누릴 이득은 자신이 취하고 혹시 실패했을 때 피해는 제3자가 대신 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반시장적인 요구다.

■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윤이 아니라 손실

베네치아에서는 두 가지를 “페카도 모르탈레”(용서받지 못할 죄)로 취급했다고 한다. 그 중 하나는 공직자가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흥미롭게도 다른 하나는 기업가들이 이윤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부러 손실을 보려는 기업가는 없겠지만, 손실 발생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포함한 희소한 자원을 과거의 용도에 비해 가치가 낮게 쓰이도록 만들었다는 뜻이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이윤발생을 탐욕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손실발생을 용서받지 못할 죄라 했다. 베네치아가 번성했던 이유를 짐작케 한다.

이제 우리도 손실을 내는 것을 “용서받지 못할 죄”로 불러야 한다. 회사가 이윤을 내면 이를 법인세 등으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수록 시장경제는 잘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유혹을 자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회사가 손실을 내어 부도 직전이라면 무슨 장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뻔뻔하게 국고지원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이를 받아 줘서도 안 된다. 가끔씩 고용유지를 명분으로 이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추가 대출을 할 것인지 여부는 오로지 자신의 재산이 걸린 채권자들이 결정해야 한다. 높은 법인세이든 부도직전 기업에 대한 지원이든 그런 게 실행될수록, 자원을 더 가치 있는 용도로 전환하려는 기업가정신은 좀먹는다.

■ 법인세 인상과 좀비기업 양산

아쉽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두 가지 모두 주장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야당이 법인세, 특히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자고 나서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운과 조선산업을 비롯한 구조조정의 문제에 있어 국책은행들은 시장경제의 원칙과는 다른 행태를 보임으로써 부실이 누적되어 좀비기업들이 넘쳐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 반기업정서와 반시장정서

사실 반기업정서가 반영된 법과 규제들이 결국 시장의 작동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반기업정서는 곧 반시장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반기업 정서가 기업들의 반시장적 행동으로 인해 잉태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통한 외국산 자동차 수입 저지 등의 규제적 입법을 이용해서 신참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특권을 누리려고 하거나, 정치적 입김을 이용해서 기존 대출의 부담을 덜어내거나 특혜적 조건의 대출을 확보하는 행태를 기업들이 보인다고 해보자. 만약 이것이 반기업정서의 원인이라면 이런 반기업정서는 이를 바로잡으려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것을 반시장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결국 시장경제질서의 철저한 추구가 중요

결국 대답은 시장경제 질서의 철저한 추구다. 무엇보다 대기업집단이 지대추구를 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과 같은 주장이 제기될 때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는 힘은 자신이 그런 원칙을 지켰을 때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단지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으로는 사람들의 반기업정서를 일부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다가는 이윤을 일종의 약탈의 결과로 이해하고 사회적 공헌 활동을 이런 약탈을 사회로 되돌리는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이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업들을 적대시하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약자가 다 죽으라는 말이냐고 항의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 사장이 왜 약자인가. 대기업 회장이 약자가 아니듯이 중소기업 사장도 중소기업고유 업종 지정과 같은 정부 보호가 필요한 약자가 아니다. 소위 귀족노조도 마찬가지다. 정부로 하여금 누군가를 돕게 하고 싶다면, 수혜자는 시장경제에서 교환할 것이 없어 굶을 지경에 있는 사람으로 국한돼야 한다.

시장경제 원리를 무너뜨려 자의적으로 특정인에게 특권을 부여해서 그를 시장경쟁에서 배제함으로써 독점을 만들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가 약자라는 보장도 없

지만, 약자라 하더라도 철저히 시장의 규칙을 지키는 게 최고의 규범이 되어야 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음의 소득세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된다.

결국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에 대한 이해가 향상될수록 반시장적인 반기업정서가 축소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시장의 윤리와 자유의 윤리를 계속 알리고, 반기업정서에 편승해 반시장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을 제어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 등을 내세워 자신의 실패와 손실을 남들에게 전가하는 '반시장적' 행동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반기업정서의 깊은 뿌리

김 대 호
(사)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반기업정서는 기업 활동(이윤추구, 투자, 고용, 구조조정 등) 전반을 아주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반기업정서는 '호시탐탐 반칙, 변칙을 저질러서 자기 배만 채우려는' 자본(기업)을 국가가 행정적, 사법적 수단(규제와 처벌 등)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결된다. 이 정서가 저변에 흐르는 한, 기업 활동을 옥죄는 수많은 규제 개혁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물질적문화적 생산력이 서서히 고사하면서 한국은 3류, 4류 국가로 전락할 수 에 없다.

한국에서 반기업 정서를 성토하는 사람들은 대개 '사농공상'의 차별적 질서를 강요했던 조선 유교체제를 그 뿌리로 본다. 또한 20세기 중반 한반도를 풍미했던 획일적 평등주의(사회주의)와 개인 및 기업의 이기심을 이타심(공공성)으로 전환시키는, 시장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시각들이 한국 특유의 반기업정서의 실체와 뿌리를 너무 일면적으로 본 소치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반기업정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 실체, 뿌리, 구조를 제대로 보는 것이 급선무다.

■ 시장구조

한국 경제의 주력인 대기업과 재벌은 수공업자와 소자본가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기반으로, 긴 세월에 걸쳐 자본을 축적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다. 국가(정치와 관료)가 정치적, 전략적으로 자원(지대)을 특정 집단(부문, 산업, 기업, 직업)에 몰아준데 크게 힘입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국가독점기업(공기업), 민간독과점 대기업, 은행, 방송, 통신 등 규제산업은 경쟁업체, 협력업체, 소비자의 견제, 선택으로부터 자유롭기에 초과이윤을 누리는 것은 당연지사. 재벌대기업의 주력 기업 중에는 공기업

을 불하 받아 만들어진 곳이 적지 않다. 문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과점 구조가 크게 해소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각종 특혜적 지원을 통해, 철강, 석유화학 등 중간재, 자동차, 가전 등 수출용 가공조립제품, 자주 국방용 무기생산을 책임질 대기업을 먼저 육성하고, 이 원청 대기업 주도로 부품 국산화 차원에서 하청/중소기업을 육성했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힘(선택권과 거부권)의 격차가 너무 크다.

한편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소수 대기업들은 글로벌 초대기업으로 성장하여, 한국 시장이라는 연못의 고래 같은 존재로 되었다. 이들은 해외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거대한 수요독점기업이 되어, 하청 협력업체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 하청 협력업체의 상당수도 유럽, 미국, 일본의 그것과 달리 스스로의 힘(기술력과 영업력)으로 커 올라 온 것이 아니라, 원청 대기업에 의해 육성되었기에 교섭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원청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하는 각종 제도, 문화적 장치 – 공정거래 감독과 내부자 고발 보호 장치 등 – 도 부실하고, 또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하여 좀 더 악화 되었을 것이다.

힘 격차가 크면 일본식 영주-가신 관계(협력업체의 충성, 모기업의 자제, 보호, 배려를 통한 장기지속관계)라도 되면 그 폐해가 다소 덜하겠지만, 한국은 시장구조는 그대로 두고, 공정거래 감시감독(초과착취 방지) 장치도 부실한 상태에서 미국식 시장질서의 외양만 수입하면서 갑-을 문제가 심각해 졌다.

요컨대 유럽,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 하면 한국은 섬나라와 다를 바 없다. 지대할당 방식의 산업발전 전략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적다. 수요 독과점이거나 공급 독과점인 시장이 정말 많다. 그로 인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국가 통제가 유달리 많다. 시장참여자 자격. 팔 수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 각종 행위와 가격(요금) 규제가 정말 많다. 금융, 교육, 방송, 통신, 보건의료 등 규제 산업과 공기업으로 대표되는 국가독점 산업과 자동차, 설탕, 맥주 등 민간독과점 산업 등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같은 규제 산업이라 할지라도 유럽, 미국, 일본, 중국과 한국은 그 내용이 다르다. 시장구조가 다르다. 공기업과 한국의 민간독과점 산업도 마찬가지다.

수요나 공급 독과점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선택권과 거부권이 지극히 비대칭적이다. 시장경제의 대전제인 자유롭고 공정한 (공급)경쟁과 거래로 돌

아가는 곳이 의외로 적다. 경제 구조 전반이 일종의 먹이사슬 구조로 되어 있다.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와 허술한 감시감독 장치가 반기업정서의 주요한 원천 중의 하나이다.

사실 한국은 시장이 잘 작동하는 영역, 즉 경쟁과 거래가 자유롭고 공정한 영역은 격차는 클지언정 약탈(초과착취)은 일어나지 않는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의 갑과 다른 선택권이 없어 궁박한 처지의 을 간의 먹이사슬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노동시장도 그 중의 하나이다. 사람 값(임금)이 노동의 질(직무성과)가 아니라, 소속에 따라 천양지차가 난다. 공장 바깥에서는 연봉 3~4천만 원으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지만, 연봉 1억 원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근로조건은 개인이나 팀의 생산성의 함수가 아니라, 소속 직장의 수익성이나 지대수취 능력과 노동의 교섭력의 함수로 여겨진다. 소속 직장이 계급처럼 되었다.

한국은 공기업, 독과점기업, 노조, 농협, 직능 협회, 정치와 관료 등이 자원 배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상층 노동시장, 농업, 의료, 통신, 금융 등)에서 합법적, 제도적 약탈이 유달리 많이 발생한다.

약탈의 주된 수단은 수요와 공급, 경쟁과 거래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는 시장(땅, 생산물, 노동 등)에서 발생하는 지대다. 한국은 부동산이나 괜찮은 직장을 가진 상층 인구 대부분이 두터운 지대를 깔고 있거나, 세금을 깔고 앉아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곳곳에 넘쳐나는 지대, 곧 사회적 약탈에 대해서도, 세금 소득자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의 고용임금, 연금, 복리후생과 보직, 승진, 배타적 업역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토론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설상가상인 것은 이것이 한국 사회의 유력한 표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토로할 만큼 글로벌화된 시장의 힘이 위세를 떨치긴 하지만, 한국은 다양한 유형의 지대=초과이윤=초과착취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 바람이 그렇게 거세게 부는 와중에도 지대=렌트 자체를 축소하는 시장주의적 개혁-공기업 분할 민영화, 협력업체와 소비자의 대항력 강화 등--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노조운동 역시 산업 차원의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 표준 형성을 지향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의 칼끝이 겨냥

한 곳은 대체로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었다. 부차적으로 재벌대기업의 갑질, 변칙 상속, 사내하청(정규직)이었다.

■ 상거래 문화

한국의 '화전민적' 상거래 문화도 반기업정서의 주요한 원천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그것은 힘이 허용하면 혹은 기회가 주어지면 전후방 협력업체나 소비자로부터 최대한 빨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은 원청과 1차 협력업체 간에만 가혹한 약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1차와 2차 협력업체 간에도, 2차와 3차간에도 줄줄이 일어난다. 이는 국가의 개입(법정 최저임금 등)이나 거래 당사자의 단호한 거래 거부에서 비로소 막힌다.

갑-을 간의 갱팍한 거래 행태는 유럽의 길드처럼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 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 하는 노하우=상거래 윤리=지혜가 쌓인 자본이 부재한 탓도 있고, 거래 당사간의 현격한 힘의 격차가 큰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폭우와 가뭄과 태풍을 불규칙적으로 선사하는 풍토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는 것은 해방 이후의 습성인지, 조선 후기의 습성인지, 한반도가 살아남은 사람들의 유전자에 각인시킨 습성인지는 모르지만, 원청/대기업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조장하는데 일조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 기업 지배구조

미국의 경제정보 미디어 블룸버그가 발표한 세계 400대 부자 목록(2015.12.31.기준)에 따르면 400명 중 259명(65%)이 자수성가(self-made)형이고 나머지는 상속형이었다. 미국은 125명 중 89명, 중국은 29명 중 28명, 인도는 14명 중 9명이 자수성가형이었다. 일본은 5명 모두, 러시아는 18명 모두 자수성가형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5명 모두가 상속형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들이다. 모두 재벌 2~3세로 부의 원천은 상속(inherited)이다. 그 아래 1천대, 1만대 부자들의 부의 원천(성격)에 대한 조사는 없지만, 한국은 상속자의 비율이 매우 높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단적으로 웬만한 중견기업과 도심 요지의 수많은 빌딩(한국에서는 알짜 자산)과 지방의 웬만한 좋은 땅의 소유주 역시 서울 강남에 주소지를 둔 상속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그 바닥을 아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다.

사실 이 뉴스를 보도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등도 원천은 상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의 최고 권력자는,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표방하는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3대 세습이다. 남한의 최고 권력자도 정치적 자산의 핵심은 상속이며, 야당의 그 상대역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자도 정치적 자산의 핵심은 죽은 친구(고노무현 대통령)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축적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들의 행운이나 변칙, 편법만 탓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도전자(벤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와 정치적 도전자(새로운 가치, 비전을 가진 정치세력)들의 무능도 무능이지만, 이들이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황폐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심각한 것은 상속형 부자와 상속형 권력자들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너무나 쉽게 부와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능력이 전혀 검증 안 된 사람들이 수천, 수만, 수십만, 수천만 명의 밥줄이 달려 있는 재벌대기업과 정당과 국가를 직접 경영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무능한 사람이 거대한 부와 권력을 마구 주물러 댈 때 일어나는 참상은 역사에서 숱하게 찾을 수 있다. 멀리 갈 것까지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야 말로 상속형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부실도 세계 해운업의 불황과 더불어 현정은과 최은영이라는, 오랫동안 집안 살림만 하다가 갑자기 대기업 경영을 하게 된 두 미망인의 경영 능력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중평이다.

대한민국이 상속자의 나라로 전락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몇 년 간의 거친 구조개혁(구 시스템 파괴)후에 새로이 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탓이 크다. 영국, 미국 등에서 그 성과를 입증한 시장주의적 개혁을 모델로 한 구조개혁은, 의도와 달리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해 온 기업(집단) 및 금융기관을 집중적으로 쓰러뜨렸다. 방어적인 경영을 해온 기업 및 금융기관들을 적자(適者)로 만들어 버렸다. 한 술 더 떠서 공공부문과 부동산 소유자를 진정한 승자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에서 반기업정서를 완화 하려면, 합법적·제도적 약탈이 만연한 시장구조와 약탈형·상속형 기업지배구조와 좀 더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 감독 장치 등을 고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4길 38(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3층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